<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원유 수입시 환경세 부과를 …

발유 가격을 놓고 정부와 정유기업간의 알력이 계속되고 있다.
정유 5사를 대리해 대한석유협회가 휘발유 가격이 높은 것은 정유기업들의 폭리가 아니라 과중한 세금 때문이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는 98년부터 외국자료들을 인용,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대단히 비싸고, 비싼 이유가 각종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강변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98년8월 정부가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한 후 나온 휘발유 가격 리터당 1224원 중 73%인 898원이 세금이라는 언론 플레이이다.
휘발유 리터당 1224원의 소비자가격에는 교통세 691원, 교육세 103.65원, 부가세 103.68원 등 각종 세금이 898.33원이나 붙어 휘발유 가격인상이 전적으로 교통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며, 주유소가 세무소 대신 세금을 걷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을 펴게 된 동기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00원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승용차 이용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조사결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유기업들은 내심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경쟁적인 신증설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유기업과 소비자보호원이 9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 승용차 운전자 10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00원일 경우 39.9%, 1500원일 경우 61.4%가 출퇴근용 승용차 운행을 각각 자제하겠다고 응답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도 휘발유 값이 1300원일 때 40.3%, 1500원일 때는 49.3%가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응답자의 55.9%가 승용차 운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67.5%가 승용차 운행을 예전보다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가용 운전자의 53.3%는 카풀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출퇴근용 차량의 평균 탑승인원도 1.47명에 불과,「나홀로」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휘발유에 대한 세금부과는 물론이고, 부과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된다. 경인지역 대기오염의 45% 안팎을 자동차 매연이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터이다.
세금이 과중하다는 것도 실상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통지옥 현상이 심하지 않는 영국은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81.98%, 프랑스는 81.15%, 핀랜드는 78.44%, 독일은 75.60%, 노르웨이는 75.58%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98년8월 OECD 회원국 가운데 비산유국을 대상으로 조사한「국가별 유가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가는 리터당 1224원(달러당 원화환율 1337원 기준)으로 프랑스 1351원, 이태리 1302원, 스웨덴 1295원, 벨기에 1273원에 이어 OECD 비산유국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회원국의 평균가격 1501원보다 173원, 일본의 850원에 비해서는 374원이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4개국이 우리에 비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제외한 3개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세금비중이 높지 않음은 물론이다. 즉, 휘발유 가격이 비싼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정유기업들의 폭리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과도한 부채와 터무니없는 선물공세도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꽁짜! 엔크린…』이나,『한번 받고 두번 받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묻고싶을 뿐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서는 원유 도입시 환경세를 50-100% 부과하고, 도로주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45.2%가 휘발유에 대한 주행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40.9%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낭비, 대기오염, 교통체증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화학저널 1999/2/8>